기사연 리포트 20호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국내외 물가 상승과 소득불평등"

권 두 언)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국내외 물가 상승과 소득불평등 _ 김영주 3

물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_ 황경인 6

인플레이션: 경제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위기인 동시에 기회인 _ 정용택 18

기사연 소식 29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권 두 언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국내외 물가 상승과 소득불평등

김 영 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밀, 옥수수의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며, 국제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또한 폭염과 가뭄 같은 이상기후로 작황 부진에 대한 우려가 증대, 식량 수급이 불안정한 추세로 접어들자 수출 규제 움직임은 커지고 있으며, 국제곡물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국제곡물 가격의 상승은 원재료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국내 식료품 관련 품목의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치며, 국내 가공식품과 외식가격, 즉 물가상승의 오름세는 지속될 전망이다.[1]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6.0%, 생활물가지수는 7.4% 으로 각각 높은 비율로 상승한 상태이다. 전년동월대비 농축 수산물과 공업제품, 서비스 등의 주요 등락품목

1) 오강현·임웅지·이택민·김윤경·이재진·최열매, “최근 애그플레이션 현황 및 시사점,”「BOK 이슈노트」제2022-23호(22.6.21)p.1-12

중, 돼지고기(18.6%), 수입소고기(27.2%), 배추(35.5%), 경유(50.7%) 휘발유(31.4%), 등유(72.1%), 보험서비스료(14.8%) 등은 소비자물가지수(6.0%)와 생활물가지수(7.4%)보다 상승 폭이 크다.[2)]

그렇다면, 물가상승률 대비 소득증가율은 어떠한가?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4만 3,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4.6% 증가했으며,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3만 3,000원으로 11.5% 증가했다. 5분위보다 소득증가율이 큰 1분위의 소득증가율이 소득격차의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3)]했지만, 1분위와 5분위와의 소득금액의 폭은 여전히 크며, 소득증가율은 주요 물가 상승 품목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소득증가대비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상승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미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실업률 상승, 노동시간의 감소, 경제활동인구의 이탈과 실업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과 소득 불평등을 가중시켰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보고서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2021.9, 송상윤)[4)]은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소득 불평등 변화의 양상을 살피고 있는데,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가구 소득불평등이 확대된 원인으로 '고용충격'과 '소득충격'을 꼽는다. 보고서에서 말하는 고용충격(실업·비활경 증가)의 요인은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실업과 구직단념 등의 영향으로 1분위 속한 핵심 노동 연령층 비취업 가구 비중의 상승이다. 특히 고대면 일자리 가구에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가구, 양육부담이 큰 여성·유자녀 가구의 실직이 비취업 가구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하며, 취업가구 소득 감소를 말하는 소득충격(저소득층 취

2) 통계청, "2022년 6월 소비자 물가동향,"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19125

3) 기획재정부, "2022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결과,"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08035

4) 송상윤,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BOK 이슈노트」제2021-9호(2022.5.11.)

업가구의 소득감소)의 요인은 고대면 일자리에 종사하는 자영업 가구와 여성·유자녀 가구의 소득감소가 중·하위소득 간 격차 확대 요인으로 분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남성 및 무자녀·여성가구보다 유자녀·여성가구에서 비취업가구 비중의 더 크게 상승하였으며, 소득 1분위에 속한 취업가구 중 고대면 일자리에 종사하는 유자녀·여성가구의 경우 소득이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보고서는 여성·유자녀 가구의 경우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성별 소득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음을 밝히며,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이 저소득층과 유자녀·여성가구에 집중되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 확대 현상이 고착화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5)]

통계로 보는 저소득층의 깊어지는 빈곤은 자력으로 벗어나기 어렵다. 표피적 정책 대안이 아닌 각종 불평등과 불안함을 완화하는 사회안전망을 모색하며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당과 정치인, 시민운동단체와 기독교, 모두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불평등한 땅에서 가난한 자의 삶과 존엄을 위해, 그편에 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공동의 선이다.

---

5) 송상윤,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BOK 이슈노트」제2021-9호(2022.5.11.) p.1-13

물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황 경 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서론 : 고물가와 고금리의 '퍼펙트 스톰' 가시화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가 하나 있다. 퍼펙트 스톰. 원래 둘 이상의 태풍이 충돌하여 그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기상 용어인데 2008년도 리먼브라더스 파산, 금융시장 폭락 등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전세계 경제위기로 번진 현상을 설명하는 경제 신조어가 됐다.

그런데, 최근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퍼펙트 스톰이 다시 몰려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 따른 어려움이 채 아물기도 전에 고물가, 고금리 등의 경제 악재가 한꺼번에 덮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선, 물가가 심상치 않다. 지난 5월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였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년 8월, 5.6%) 처음으로 5%를 넘어선 수치이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최근 미국(5월, 8.6%)과 EU(5월, 8.1%)의 소비자 물

가상승률은 나란히 8%를 넘어섰다. 미국은 40년만에, EU는 통계 집계(1997년) 이후 최고치이다.

그리고, 각국은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중이다. 지난 6월 15일 미 연준은 28년만에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올 초만해도 미국 정부는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하지만 물가 급등 압력으로 결국 미국은 금리 인상, 그것도 큰 폭의 신속한 인상으로 선회했다. 우리 역시 곧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2022년 5월 현재 기준금리 1.75%). 전문가들은 곧 발표될 6월 물가가 6%대를 기록할 경우 한국은행이 '빅스텝'(한번에 0.5% 포인트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퍼펙트 스톰이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의 원인, 글로벌 공급망 붕괴

최근의 인플레이션(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의미)의 근본 원인은 바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현재 인플레이션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면서 물가 급등의 원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발생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꼽았다.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이 실시한 연구에서도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인플레는 수요 요인보다는 공급망 혼란에서 비롯된 공급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의 시각도 비슷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미증유의 퍼펙트 스톰이 밀려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전 세계 가치사슬이 얽혀 있어 오일쇼크 때보다 훨씬 큰 위험이 닥쳐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공급망이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과정이 다수의 국가에 걸쳐 형성된 국제 분업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런데 글로벌 공급망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19로 세계 곳곳에서 봉쇄조치가 이어져 각종 생산시설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 가운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위드 코로

나'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억제되어 왔던 소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주지 못하는 이른바 '글로벌 수급 불균형' 심화 현상이 나타났고 소비자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각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제로금리 및 양적 통화 확대 정책을 실시했고 그 결과 시장에는 유동성이 넘쳐났지만 주요국 물가는 2% 이내에서 머물렀다. 이러한 저물가 현상은 사실상 1990년대부터 이어져 왔는데 오랜 기간 낮은 물가를 유지한 데에는 바로 글로벌 공급망 체제의 확산의 공이 크다. 특히 중국이 2001년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 국가로 부상하면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맡았던 것도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동력이 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붕괴 현상이 나타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최근 어거스틴 카르스텐 국제결재은행(BIS) 총재는 오랜 기간 지속됐던 '저(低)인플레이션'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단언하기도 했다.[1)]

글로벌 공급망의 장기 추이

〈그림 1〉

세계 GDP 대비 교역 추이

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 Antras(2020)에서 재인용

〈그림 2〉

세계 총수출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Borin and Mancini(2019), World Development Report(2020)에서 재인용

1) https://www.wsj.com/articles/bis-head-says-era-of-weak-inflation-might-be-over-11649192407

〈그림 1〉은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 GDP에서 교역(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를 나타낸 그림이다. 통상 GDP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화(Globalization)' 정도를 나타내는 간접 지표로 사용된다. 〈그림 1〉이 시사하는 바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지난 50여년간 세계화 정도는 두배 이상(1970년 13.7% → 2018년 29.7%) 증가했다. 둘째, GDP대비 교역은 특히 1986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 셋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화는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림 2〉는 1970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교역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를 보여주는 그림이다.[2] 보는 것처럼 〈그림 2〉는 전 기간 〈그림 1〉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전 세계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교역 비중은 1986년부터 2008년까지 빠른 성장을 보이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해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글로벌 공급망이 가장 빠르게 확산되던 시기(1986년~2008년)에 세계화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즉, 세계화는 글로벌 공급망 체제의 확산과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 확산이 세계화의 동력 또는 엔진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할만한 사실은 확산 일로였던 글로벌 공급망 및 세계화 추세가 2008년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정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금융위기가 경기침체를 야기해서 교역을 급감시킨 측면이 분명 있지만, 문제는 그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회복세(Growth)가 더디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교역의 GDP 비중(〈그림 1〉)의 경우 어쨌든 과거 2008년도 수준(Level)으로 복원됐지만, 글로벌 공급망 관련 교역 비중(〈그림 2〉)의 경우에는 2008년 수준으로의 회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체제의 균열은 사실상 금융위기 이후부터 서서히 일어난 구조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 최근의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서 벗어난다 해도 공급망 위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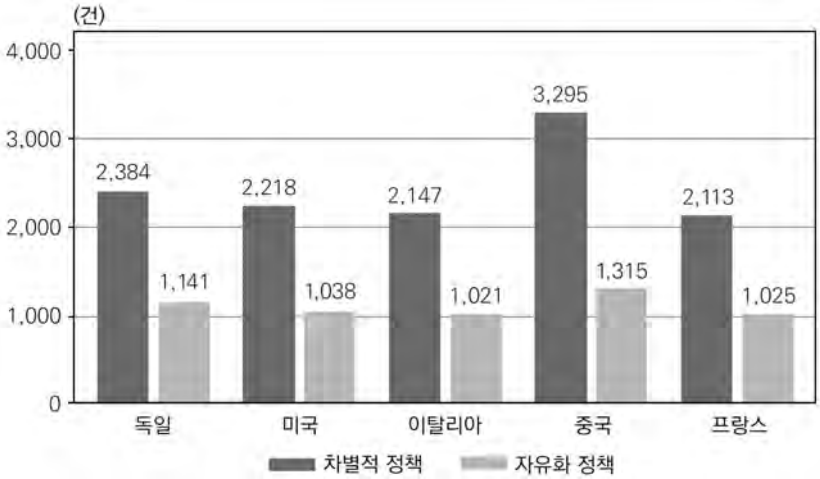
2) 〈그림 2〉에 사용된 연도별 수치들은 Borin and Mancini(2019)에서 인용함. 상술하면, Borin and Mancini(2018)는 생산의 국제 분업체계라는 글로벌 공급망의 정의에 착안해 총수출(Gross Exports) 중에서 두 곳 이상의 국경을 넘은 수출을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한 수출이라고 보았음.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그리고 미중 무역갈등

지난 20여년간 글로벌 공급망 체제의 확산을 촉진한 요인들을 열거해보면 정보통신기술(ICT) 혁명(예컨대, 이메일 사용자의 폭발적 증가), 교통운송수단의 발전에 따른 운송비 절감 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을 꼽자면 바로 1990년대와 2000년대 걸쳐 각국이 펼쳤던 무역 자유화 정책이 아닐까 싶다. 유럽 단일시장 구축을 목적으로 1993년 12개국으로 출발해 현재 총 27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창설이라든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으로 구성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이 무역 자유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 역시 1995년도에 WTO 회원국이 되었고, 2004년도에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경제권과 총 18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바 있다. 각국의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의 결과 세계 평균 관세(단순 평균 기준)는 1986년 13.6%에서 2008년 7.5%로 22년간 6.1% 포인트 감소했고 그 결과 글로벌 교역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Antras, 2020)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많은 나라들이 무역자유화 대신 보호무역주의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그림 2〉에 나타난 것처럼 그 시점부터 글로벌 공급망 체제의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림 3〉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국의 통상정책 누적 건수를 자유화 정책 및 차별적(보호주의적)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본 그림이다. 〈그림 3〉에서 제시된 5개 국가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보호주의 정책이 자유화 정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1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세계 양대 국가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2018년 7월 미국이 자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폭탄'을 투하하면서 시작된 이른바 '미국 무역전쟁'은 글로벌 공급망 체체 약화에 크게 기여했다.

〈그림 3〉 주요국의 통상정책 건수(2008~2020, 누적)



자료: Global Trade Alert, Seric et al.(2021)에서 재인용

미중 기술 패권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2019년 12월 양국간 합의로, 또 트럼프 정부가 물러나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단락될 것처럼 보였던 미중 무역갈등이 최근 양국간의 기술패권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미중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중이다. 특히 미국은 이들 첨단기술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우방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이른바 '공급망 진영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화웨이, SMIC 등 중국 테크기업들을 거래 제한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등재하여 이들 중국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했고, 작년 2월에는 반도체, AI, 이차전지, 희토류 등 4개 품목에 대한 100일간에 공급망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한 공급망 조사의 경우 반도체 수급 차질 등 코로나19 산업 현안 해소를 표면적 이유로 제시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들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이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여부이다.

만약에 상기한 미국의 '공급망 진영화' 조치들에 대해 중국이 응전 또는 확전 양상으로 간다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더욱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예를 들어 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적 광물 공급을 막는다던가, 중국이 세계 최대 수요 시장이라는 점을 활용해 미국 및 미국의 우방국에 대한 대중국 수입을 금지하면 글로벌 공급망 교란 현상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에 놓여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첨단 분야는 그 자체로도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이지만, 자동차, 전자 등 타 산업의 전방에 위치해 이른바 산업 연관효과가 높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높다. 따라서 반도체나 이차전지의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작년 내내 문제가 됐던 반도체 수급 차질 현상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반도체 부문도 공급보다 수요가 높은 수급 불균형 문제를 겪게 됐는데, 그 불똥이 전방산업인 자동차 산업까지 튀게 된 것이다. 반도체 수급 차질 지속으로 완성차 생산이 지연되면서 현재 대부분의 신차 출고 대기시간이 6개월에서 많게는 1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수급 불균형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회복이 가능하지만 미중 패권경쟁과 같은 외생적 정책 요인에 의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는 시간이 지나도 원상 회복이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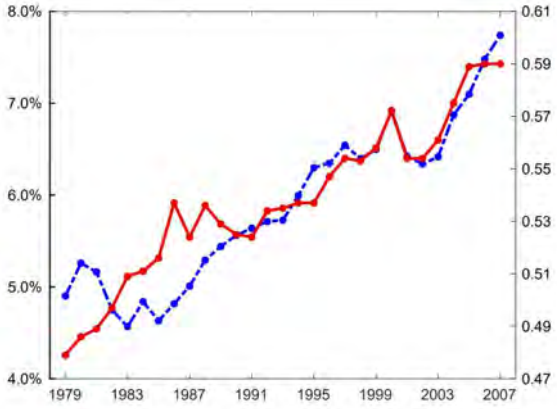
자유무역과 불평등

2016년도에 미국과 영국에 각각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결정. 두 사건 모두 예상 밖의 결과였으나, 분명한 점은 두 사건 이후 양국은 경제 정책의 방향을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일의 기저에는 "자유무역이 불평등을 증가시켜 삶에 고통을 주었다"고 믿고 있는 적어도 절반 이상의 양국 대중의 지지가 있었다.

---

3)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3/18/2022031801712.html

〈그림 4〉 무역과 불평등 추이(미국)



자료: Antras, De Gortari and Itskhoki (2017)

주 : 푸른색 점선과 붉은색 실선은 각각 미국 경제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미국의 지니계수(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추이를 의미

데이터 역시 무역과 불평등 간의 상호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림 4〉는 미국 경제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푸른색 점선)과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붉은색 실선)의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놀랍게도 두 지표는 1979년부터 2007년까지 비슷한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경향성뿐만 아니라 인과적으로도 그렇다. 최근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이 불평등을 증가시켰는지에 대한 인과 효과(Causal effect) 여부를 분석했는데, Antras(2020)에서 언급된 것처럼 경제학자들의 대답은 대체적으로 'Yes'이다.[4)]

따라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보호무역으로의 회귀는 그동안 자유무역,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체제에서 소외됐던,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를 입은 계층의 정치적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경 간에 담을 높이고, 무역전쟁을 벌이는 등의 보호무역 정책이 무역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피해계층의 회복을 도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까? 이들 질문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대답은 대체적으로 'No'이다.

4)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할 것: Krugman(2008), Goldberg and Pavcnik(2007), Autor, Dorn and Hanson(2013), Pierce and Schott(2016).

2019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의 대답(Benerjee and Duflo, 2019)은 이렇다.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면 그동안 중국에 경쟁력이 밀려 어려웠던 분야(예 : 철강산업)에 속한 사람들은 분명 이익을 보겠지만, 중국과의 교역이 닫혀버린 분야(예: 농업[5])에서 막대한 새로운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보호무역은 결코 근본적인 처방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결론 :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제언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1) 최근 고물가 및 고금리로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번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있음을 밝히고, (2)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수급 불균형 때문이지만 2010년대 들어 나타난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하면서, (3) 특히 미중 무역갈등이 최근에 양국간 기술패권 경쟁 양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므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이라 전망했다. 아울러, (4)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발흥의 기저에는 무역으로 고통을 입은 계층의 정치적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 지적하며,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 사이의 담을 높이는 보호무역은 불평등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밝혔다. 고물가와 고금리, 글로벌 공급망 붕괴 및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시대에 요구되는 정책 방향에 대해 3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겠다.

첫째, 고물가와 고금리로 피해가 예상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물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피해가 더 크다. 생필품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 가계의 지출구조를 볼 때 장바구니 물가 상승시 고소득층보다 생계에 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늘어나는

5) Benerjee and Duflo(2019)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임. 미국에서 수출되는 농산품의 16%가 중국으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짐.

이자부담에 대한 타격 또한 저소득층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기업에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발언을 했는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임금 상승 억제와 같은 근거가 빈약한 대안을 내놓는 대신 고물가 시대에 서민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이자부담을 낮출 사회적 안정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중 패권경쟁 및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화 시대가 종말을 맞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무역은 여전히 저개발국과 선진국을 막론하고 빈곤퇴치, 경제적 성장과 번영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며, 우방국과만 교역하고 적성국에는 국경의 담을 높이는 방식의 차별적 무역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속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 편에 섰을 경우 그에 따른 대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자택일식 논리는 지양하고 비록 지난한 일이지만 정확한 상황인식을 기반으로 사안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안보 정책을 펴나가는 '현명함'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다.

셋째, 불평등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세계화는 경제적으로 풍요를 가져왔지만 불평등 심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낳았다. 지금 불평등 개선은 국가를 막론하고 시대적 화두다.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들은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새로 들어선 정부의 방향 설정이 다소 아쉽다. 신정부 110대 국정과제 등을 살펴보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할 뿐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적 노력은 미흡해 보인다. 정부는 불평등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한다.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① 고물가/고금리 시대 저소득층 지원 강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온세계에 임하기를 구하며(②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대책 마련), 공동체, 특히 성만찬에 있어 가난한 자와 부자를 동등하게 대하는 정신을 견지하는 것은(③ 불평등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오늘날에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운 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마가복음 6장 37절)"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 교회가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Antràs, P. (2020). De-globalisation? Global value chains in the post-COVID-19 age (No. w2811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Borin, A., and Mancini, M. (2019). Measuring what matters in global value chains and value-added trad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8804).

World Bank (2020). World Development Report 2020: Trading for Development in the Age of Global Value Chains. World Bank Publications.

Seric, A., H. Gorg, W. Liu, and M. Windisch (2021). Risk, Resilience, and Recalibration in Global Value Chain. VoxEU.org, 7 January.

Antràs, P., De Gortari, A., and Itskhoki, O. (2017). Globalization, inequality and welfar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08, 387-412.

Krugman, P. R. (2008). Trade and wages, reconsidered.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008(1), 103-154.

Goldberg, P. K., and Pavcnik, N. (2007). Distributional effects of glob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5(1), 39-82.

David, H., Dorn, D., and Hanson, G. H. (2013). The China syndrome: Local labor market effects of import competition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103(6), 2121-68.

Pierce, J. R., and Schott, P. K. (2016). The surprisingly swift decline of US manufacturing employ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106(7), 1632-62.

Banerjee, A. V., and Duflo, E. (2019). Good economics for hard times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PublicAffairs.

인플레이션: 경제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위기인 동시에 기회인

정 용 택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코로나가 가고 인플레이션이 왔다

2022년 들어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치명률도 낮아지면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일부 또는 전면 해제하였다.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태(pandemic)에서 전염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풍토병(endemic disease)으로 굳어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판단을 각국 정부가 내리면서, 마침내 기나긴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의 복귀가 서서히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의 전환과 동시에 전지구적으로 새로운 재앙이 찾아오고 있다. 연일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물가상승의 재앙 말이다. BBC 코리아에 따르면, “현재 높은 물가 오름세를 주도하는 요인으로 에너지, 식료품 가격, 수요자 측 물가상승 압력, 공급 병목현상, 임금 상승 압력, 주거비와 유동성 등 여러 가지

가 있다."[1] 그중에서도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 등으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2]

물론 현재 한국 언론에서 가장 강조되는 사실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2년 동안 아시아 선진국 중 한국의 물가가 가장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6월 20일 발표된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아시아 선진국 중 1위, 세계 전체로는 18위를 차지했다.[3]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국의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르고 있는 것일까? 5월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중 각각 4.5%, 2.9%로 올해 2월에 전망했던 수준(3.1%, 2.0%)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서도 말했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글로벌 공급의 차질이 심화되었고, 엔데믹 국면으로의 전환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공급 및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모두 증대되었기 때문이다.[4]

물가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e)			2023e)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소비자물가	2.5	4.4	4.6	4.5	3.3	2.5	2.9
식료품·에너지 제외	1.4	3.0	3.3	3.2	2.8	2.3	2.6
농산물·석유류 제외	1.8	3.5	3.8	3.6	3.4	2.8	3.1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2.5), 34쪽

1) 나리 킴, 「물가 상승: 월급 빼고 다 오른다...물가 계속 오르는 이유」, 〈BBC 뉴스 코리아〉(2022.6.16.) https://www.bbc.com/korean/news-61779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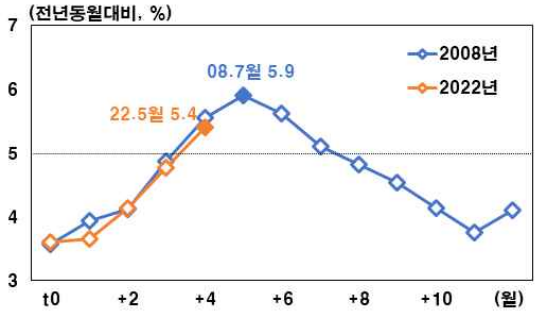
2) 배근미, 「"글로벌 인플레, 연말까지 지속…정책 정상화 통해 기대인플레 낮춰야"」, 〈아주경제〉(2022.6.2.) https://www.ajunews.com/view/20220602081725780

3) 이고운, 「살림 팍팍해진 이유 있었네…한국 물가상승률 亞 선진국 중 1위」, 〈한국경제〉(2022.6.20.)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6201765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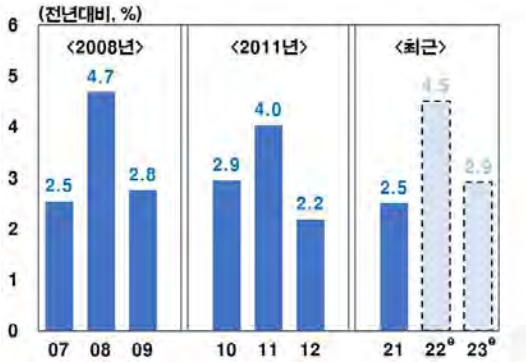
4)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2.5), 31-34쪽.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9/view.do?nttId=10070901&menuNo=200066&pageIndex=1

하지만 한 달 후인 6월 21일에 발표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앞서 예측했던 수치인 4.5%를 넘어선, 정확히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4.7%)의 수준마저도 넘어서는 고물가 국면이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당초 예측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3%대를 나타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중 4%를 상회한 데 이어 5월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고 한다.[5)]

2008년과 최근 급등기 물가 움직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2022-06-27호), 16쪽

비단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 역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출하고 있다. 예컨대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5월 말에 발행한 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4월 소비자물가는 2021년 4월 대비 4.8%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농축수산물(1.9%), 공업제품(6.9%), 서비스(3.2%) 전반에 걸친 물가상승률이 모두 확대됨에 따라 현재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된다.[6)] 심지어 이러한 물가상승에 따라 실

5)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2022-06-27호), 15-16쪽.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71192&menuNo=200690

6)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 동향』 제29호, 2022, 17쪽.
https://www.nabo.go.kr/Sub/01Report/09_Board.jsp?func=view&bid=63&bidx=&idx=7758

질소득이 저하됨으로써 코로나 방역 대책이 완화 및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민간소비는 오히려 2021년보다 증가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동향과 전망을 종합했을 때, 현재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곧 인플레이션(inflation)이 일어나고 있음이 확실하다. 정확히 물가가 몇 % 이상 상승할 때 인플레이션으로 정의할지에 대해선 이견이 분분하지만, 통상적으로 연 4~5% 정도로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인가, 스태그플레이션인가?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경기침체기에는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호황기에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었다. 그래서 호황기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 반대로 불황기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deflation)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미국을 포함한 많은 선진자본주의 경제에서 1973~74년 1차 오일쇼크(유가파동)와 1979~81년 2차 오일쇼크를 차례로 겪는 중에 경제성장률이 낮은 불황기였고 실업률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리하여 경기불황을 나타내는 실업과 경기호황기에 발생한다고 믿었던 인플레이션이 이례적으로 동시에 증가할 때, 스태그내이션(stagnation, 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 물가상승)의 기묘한 조합을 설명하기 위해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란 새로운 용어가 생겨났다. 한 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은 실업률이 상승함과 더불어 국민소득의 증가세가 현저히 축소되는 장기불황과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매우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을 가리킨다.[7)]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과 다른 민간기관(과 보수언론) 사이에 현재의 국면이 단순한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경기침체를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이냐를 놓고 첨예한 논쟁이

7)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한국은행, 2018, 225, 98, 169쪽 참조.

형성되고 있다. 다시 말해, 석유수출기구(OPEC)의 주도로 석유공급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저성장(불황)과 물가수준의 일반적 상승(인플레이션)이 결합한 형태로서 나타났던, 그리하여 포드주의 축적체제에서 포스트포드주의 축적체제로의 이행을 강제했던 1970년대 세계 경제위기의 대명사 스태그플레이션이 2022년 현재 재현(再現)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두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앞서 인용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 발표 당시 한국은행은 향후의 경제전망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의 성장 둔화, 주요국 금리 인상 가속 등으로 연말로 갈수록 글로벌 경기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올해 성장률이 2%(잠재성장률) 이상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8] 최근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올 연말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겠지만 그럼에도 1970년대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이러한 낙관적 전망과 달리 세계은행은 이미 6월 7일자로 발표된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1970년대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재현 가능성을 예측한 바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0년 중반에 정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던 인플레이션이 통화정책이 더욱 강화된 후에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2년 초부터 급격히 감소했다. 향후 10년 동안의 성장률이 2010년대의 평균치보다 낮게 유지될 것으로, 특히 2021~2024년 성장률이 2.7% 하락하여 1차 오일쇼크와 2차 오일쇼크 사이의 기간인 1976~1979년의 하락률의 두 배가 넘으로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각국에서 연일 최고치를 기록 중인 인플레이션과 부진한 경제성장의 장기적 추세가 결합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9]

---

8) 김경택, 「"하반기 물가상승"… 글로벌금융위기 때보다 더 오르나」, 〈국민일보〉(2022.6.21.)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200537&code=61141111&stg=ws_real

9) The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A World Bank Group Flagship Repor

기획재정부가 세계은행의 보고서를 요약·정리하여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보고서를 검토한 국내 언론들은 보고서의 핵심 주제인 스태그플레이션 관련 내용을 일제히 보도하였고, 이에 따라 언론과 민간기관들이 한국은행의 낙관적 전망을 비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예컨대, 대기업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압력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은 일찍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는데, 그들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이미 경기침체(stagnation)와 고물가(inflation)가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상황이며,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기업의 공급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10)]

한경연의 이러한 입장은 그들이 어떤 의도에서 현재 국면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주장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사실상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고 기업 공급비용 감소를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현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화답하듯 한국의 새 대통령은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의 모두 발언에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처럼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론을 근거로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는 새 정부의 철 지난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경제기조를 재천명한 셈이다.[11)] 현재 보수언론들이 한국은행의 낙관론을 비판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저의 역시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t), 2022, xv-xviii. https://www.worldbank.org/en/publication/global-economic-prospects

10) 한국경제연구원,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진행 중,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상황 악화 우려」(2022.5.25.) http://www.keri.org/web/www/news_02

11) 김다영, 「[속보] 尹대통령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민간·시장 주도로 체질 바꿔야"」, 〈중앙일보〉(2022.6.1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9607#home

현재의 높은 물가상승 추세가 단순한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인플레이션과 경기불황이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국내에서 유포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론의 저의가 아무리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세계은행의 전망대로 현재 한국 경제를 포함한 세계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와 곡물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서 시작하여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도시 봉쇄까지 이어지면서 국제적으로 원자재 조달이 어려워지고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통화긴축과 중국의 급격한 경기둔화까지 더해지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졌다.[12] 그러나 한국은행의 전망대로 민간소비가 회복될 경우 한국 경제가 올해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단정(斷定)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야말로 정치경제학적 인플레이션

그렇다면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연일 고공행진 중인 물가상승률과 경기불황 모두를 고려하되,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해버리고 다른 방식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하지도 않기 위해선,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미국의 행동경제학자 새뮤얼 보울스(Samuel Bowels)가 동료들과 함께 쓴 대안 경제학 교과서에서 제시한 두 가지 종류의 인플레이션 구별, 즉 경기적 인플레이션(cyclical inflation)과 구조적 인플레이션(structural inflation)에 관한 설명을 참조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본다.[13]

보울스의 인플레이션 이론에서 가장 주목할 지점은 경기적 인플레이션과 구조적 인플

12) 김웅, 「2022년 5월 경제전망의 주요 내용」, 〈한국은행〉(2022.5.31.)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47/view.do?nttId=10070859&menuNo=201106

13) 이하의 경기적 인플레이션과 구조적 인플레이션에 관한 내용은 새뮤얼 보울스 외, 『자본주의 이해하기』, 최정규 외 옮김, 후마니타스 2009, 608-615쪽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레이션 모두 기본적으로는 "고용주, 노동자, 원료 공급자, 정부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소득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 결과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인플레이션은 소득의 분배, 특히 자본가계급의 이윤과 노동자계급의 임금 간의 분배를 둘러싼 화해 불가능한 갈등의 결과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런 전제하에서 경기적 인플레이션은 앞서 살펴봤듯이, 고용률이 높아 원료비용과 노동비용이 함께 상승하는 경기호황기, 특히 경기순환의 호황기가 끝날 시점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가리킨다. 그것은 실업률이 하락할 때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반대로 실업률이 상승할 때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경기순환 과정 내에서의 일반적인 경향, 즉 인플레이션-실업 사이의 상충관계(trade-off)를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실질 국내총생산이 장기 평균적인 수준(장기 성장추세)보다 높고, 낮은 호경기와 불경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기적인 경기변동에 의해 유발된 전형적인 인플레이션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구조적 인플레이션은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작동과정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속도로 상승할 때 발생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정부·기업·가계가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위해 자금을 별도로 융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1974년과 1975년 심각한 불황의 저점에서 미국 경제가 겪었던 인플레이션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경기적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소득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갈등, 즉 화폐와 신용의 형태를 띤 가계·기업·정부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가 현재 시장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진 1970년대 중반의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경기순환의 후기 확장 국면에서 나타났던 경기적 인플레이션처럼 경기순환 과정 내부의 메커니즘이나 인플레이션-실업 사이의 상충관계로 잘 설명되지 않는 점이 많았다. 그것은 인플레이션이 경기순환의 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소득분배의 갈등이 경기순환 그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의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보울스는 어떠한 주요 경제적 행위자(은행, 대기업, 노동조합, 정당, 정부 등)도 자신의 의지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킬 수 없는 정치적 교착상태에서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구조적 인플레이션이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가 과도해진 '정치적' 교착상태에 시장의 공급은 제한적인 '경제' 불황이 더해진, 말 그대로 '정치경제학적' 결과물을 지시하는 것이다.

구조적 인플레이션을 넘어 포스트 팬데믹 정치로

결론적으로 필자는 현재의 한국 경제(를 포함한 세계 경제)가 놓인 상황을 단순히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냐 가운데 어느 하나로 단정하기보다는—스태그플레이션에 이미 진입했다고 확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주기적인 경기변동 과정 내의 전형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일반화할 수도 없는—차라리 포스트 팬데믹 시대 자본주의 국가의 보다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구조적 인플레이션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경기호황이 아닌 경기불황과 결합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나온 한국은행이나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들이 일관되게 강변하듯이, 2022년 하반기 들어 한국의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3.0%로 전년대비 1.0% 정도 하락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4.0%로 전년대비 1.0% 가량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의 높은 물가상승이 인플레이션-실업 사이의 상충관계가 성립하는 경기적 인플레이션의 한 국면처럼 보일 수도 있다.[14] 하지만 2022년 하반기에 이르러서도 연초의 전망과 달리 국내외 경기회복세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

결정적으로 공식실업률에선 잡히지 않는 불완전고용 및 불안정노동의 급증하는 규모와 좋은 일자리 창출 없는 경기회복, 정체된 임금수준, 만연한 고용불안 같은 전반적인

14)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 동향』 35쪽.

경제 동향으로 보건대, 한국 자본주의 역시 만성적인 노동수요 저하를 겪고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만성적인 노동수요 하락은 시장의 수요에 비해 생산설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제조업의 생산능력이 과잉에 이르렀지만 정작 수익성은 저하되면서 투자가 줄어들고 경제성장률 역시 둔화된 탓에 고용률도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경기순환의 호황이 아니라 심각한 경기불황과 결합된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15)]

둘째, 더욱 중요하게는 작금의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정치적 갈등 및 정치적 교착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신자유주의와 포퓰리즘 간의 충돌 속에서 생성된 새로운 사회주의 좌파(포퓰리즘 좌파)와 새로운 민족주의 우파(포퓰리즘 우파) 간의 정치적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거나, 아니면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 그러한 오랜 교착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보호적 신국가주의의 기치 아래 사회보호주의 좌파와 유산자 보호주의 우파 간의 정치적 대립이 '포스트 팬데믹' 국면에서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16)]

정치적으로 보자면, 2007-2008년 세계금융위기부터 코로나19 팬데믹에 이르는 긴 시간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지평이 무너지고 있는 '포스트 신자유주의' 국면에 우리가 진입하고 있으며, 그와 같이 긴장으로 점철된 정치적 교착상태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대량실업이 아니라 '불완전고용'의 팽창으로 표현되는) 만성적인 노동수요 하락을 겪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경제적 위기일 뿐만 아니라 포스트 신자유주의, 포스트 팬데믹 국면에서 소득분배를 둘러싼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정치적 위기를 표상한다.

---

15) 아론 베나나브, 『자동화와 노동의 미래』, 윤종은 옮김, 책세상, 2022.

16) 영국 정치학자 제르바우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은 경제영역에 강하게 개입하는 국가를 향한 신자유주의의 오랜 견제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큰 정부'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리하여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현재 전(全)세계적으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경제영역에 더욱 강하게 개입할 것을 요청하는 신(新)국가주의(neo-statism)가 발흥하고 있다. 파올로 제르바우도, 『거대한 반격: 포퓰리즘과 팬데믹 이후의 정치』, 남상백 옮김, 다른백년, 2022.

만일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경제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위기로서 구조적 인플레이션이라면,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극복은 오직 정치적 개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면, 그것은 또한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의 논리로 말하자면, "임대료, 배당금, 이자, 이윤, 자본소득, 로열티, 그리고 정확한 법적 분류와 상관없이 단지 토지, 부동산, 금융상품, 산업설비 형태의 자본을 소유한 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다른 소득"을 포괄하는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이 "임금, 급여, 상여금, 비임금노동에 따른 수입, 법적으로 노동과 관련된 것으로 분류되는 다른 보수"로 정의되는 '노동에서 나오는 소득'을 거대한 격차로 압도하고 있는 극심한 불평등의 현실에서,[17]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대중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나아가 자본이 독점하고 있는 사회의 공통부를 공정하게 재분배할 방법을 모색하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결국 작금의 구조적 인플레이션을 경제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위기로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학적 위기인 동시에 포스트 신자유주의 사회를 향한 포스트 팬데믹 정치 실행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악몽 같은 팬데믹으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의 연대기"[18]를 지나 정치적으로 보다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경제적으로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우며 환경적으로 보다 지속 가능하고 생태적인 세계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될 것이다.[19]

---

17)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장경덕 옮김, 글항아리, 2014, 29, 39쪽.

18) 슬라보예 지젝, 『잃어버린 시간의 연대기』, 강우성 옮김, 북하우스,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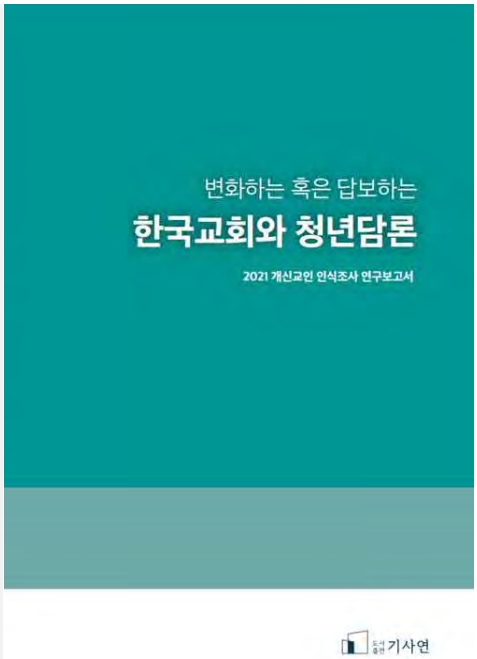
19) 정치적 교착상태 및 경제불황으로 점철된 현재의 포스트 팬데믹 국면을 포스트 신자유주의 또는 포스트 자본주의를 향한 대안 정치를 실행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급진주의적 논점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들을 보라. 그레이스 블레이클리, 『코로나 크래시: 팬데믹은 (국가독점) 자본주의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웠는가』, 장석준 옮김, 책세상, 2021; 데이비드 하비, 『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 어쩌다 자본주의는 여기까지 온 걸까』, 강윤혜 옮김, 선순환, 2021.

기사연 소식

신간안내

2021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연구 결과 단행본 **〈변화하는 혹은 답보하는 한국교회와 청년담론〉**이 나왔습니다. 이 연구서가 개신교인의 사회 인식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엮은이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김상덕, 송진순, 신익상, 이민형, 정경일 함께 씀
도서출판 기사연



기사연TV

유튜브 채널 "어쩌다 쌀-롱"을 통해 시사와 대중문화를 다루고, 교회 및 교계 이슈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편안하게 기사연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유튜브에서 "어쩌다 쌀-롱"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과 구독, 댓글을 통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www.youtube.com/c/기사연TV

공간이제

본 연구원 건물 지하1층 〈공간이제〉는 기독교 단체 및 지역사회의 모임을 위한 공간, 다양한 목소리가 공유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모임과 영상회의, 촬영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대관문의: 02-312-3317

공간이제
SPACE EZE

기사연리포트 통권 20호

발 행 일 2022년 7월 13일

발 행 처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11길 20
02_312_3317
www.jpic.org
cisjd@jpic.org